

NEWS LETTER

2026-08-31

Legal Issue

- 코인도 압류·매각...가상자산 민사집행 절차 구체화
-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예방 중심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MINWHO News

- 김경환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강연 진행
- 최주선 변호사,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Business CASE



Legal Issue

코인도 압류·매각...가상자산 민사집행 절차 구체화

김경환 대표변호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전 청구권의 집행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압류를 명하면 거래소는 채무자의 자산 처분을 제한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개설해 가상자산을 직접 팔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교환한 뒤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개인지갑 등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도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을 압류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존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이전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이었다"며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보다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을 동산처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에서, 재산적 지위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계정 동결과 자산 이전·매각 등 민사 집행 과정에서 맡는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새로운 규제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기보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해석해야 했던 상황에서, 기준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실무에 투입되는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규제라기보다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교환하는 절차는 실제 거래소 환경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압류 자산의 처분 주체는 집행 기관이고 거래소는 절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거래소에서) 저유동성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직접 교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매각 시점과 방식에 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같은 가상자산이더라도 집행관이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채권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공개 시장에서 언제 매각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며 "법원이 기준을 정하고 집행관들이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여전히 실제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은 지갑 주소와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전이 어렵고, 해외 거래소 자산은 국내 법원 명령에 현지 사업자가 협조해야 실제 압류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의 민사집행 절차는 한층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저유동성 자산의 매각 기준과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집행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예방 중심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양진영 대표변호사

최근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통신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통신-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에는 SK텔레콤(SKT)에서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관련 정보와 고객 식별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SKT 가입자와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한 약 2300만명 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이어 KT 역시 같은 해 8월 수도권 일대에 설치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펌토셀)을 통해 가입자 식별 번호(IMSI)와 단말기 정보 등 약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커들은 이를 이용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켰으며, 이후 정부 조사 과정에서 KT 내부 서버 9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LG유플러스(LGU+)도 외주 보안업체 계정 유출로 내부망이 침투당하며 서버 정보와 임직원 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고, 연말에는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에서 이용자 통화 내용이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쿠팡에서 전직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논란이 커졌고, 이후 올해 2월 추가 조사 과정에서 16만 5000여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는 해킹 공격으로 회원 정보 약 200GB 분량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금융당국은 이후 암호화 조치 미흡 등 보안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3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신한카드 내부 직원들이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외부 카드 모집인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자영업자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으로 기업들의 미흡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꼽았다.

그는 “접근 권한 관리나 이상징후 탐지, 협력업체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거버넌스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핵심 경영 이슈라기보다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조사·처분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직접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협력업체 보안관리 의무 확대 등 예방 중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MINWHO NEWS

김경환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강연 진행

김경환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 강연 진행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7월 14일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주관한 '제2기 기업법무연수원'에 강연자로 참석해 '영업비밀보호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기업 법무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와 실무상 대응 방안을 폭넓게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 보호 체계, 국내외 영업비밀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 영업비밀의 법적 성립 요건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판단 기준과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는 방법, 침해금지 기간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과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형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기업이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영업비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실무를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MINWHO NEWS

최주선 변호사,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최주선 변호사,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판결문 개방 실행 국면으로의 전환과 시사점'을 주제로, 판결문 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이자 리걸테크 기업 네플라의 대표인 최주선 변호사는 법률 데이터 활용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 데이터 정제와 메타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 포함된 단순한 오기나 불완전한 메타데이터도 AI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인식 오류로 이어져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은 정확하고 품질 높은 판결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술과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판결문 개방이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활용과 법률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 도출
2.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3.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개발용역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4. 가구 부품 모방제품 판매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원고 대리, 인용 판결 도출 승소
5. 포장재 공급계약 분쟁에 따른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제조업체를 대리해 반소 청구액 대폭 감액
6. 제품 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구조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 등 관련)
7. 투자자 중심의 경영권·지배 구조 관련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8. 해외 PG사와 제휴한 미승인 매입구조의 적법성 및 결제·데이터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9. 상장사 대상 정보보호공시 의무 및 내부 준비 체계 구축 방안 검토 자문
10. 게임 콘텐츠 기반 홍보 활동에 대한 저작권·상표권 분쟁 대응 및 내용증명 전략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